

보도시점 2025. 1. 10.(금) 16:00 (회의 종료 후) 배포 2025. 1. 8.(수)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기후위기 시대, 민생·안전과 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국민께 드리는 3가지 약속>

① 기후위기 걱정없는 「민생·안전」

- 국민 안전, 기후물가 대응 등 기후적응을 위한 범부처 민생 패키지 대책 마련
- 극한 홍수 대비 취약 하천 신속 정비, 지역공감대 기반 기후대응댐 추진
- 물 부족 지역 및 국가 전략 첨단산업에 안정적인 물 공급
-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 녹조관리 등 환경오염 관리 차질없이 수행

②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

- 국제사회·미래세대 요구에 부응하는 도전적 감축목표와 실행계획 설정
-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및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통해 시장효율적 감축
- 중소기업 녹색투자 확대(3.5조원), 정부-수출기업(협력사) 협력 기반 이에스지(ESG) 지원
- 지역별 여건에 맞는 일회용품 감량, 미래폐자원 고부가가치 재활용

③ 전 국민이 혜택받는 「환경복지」

-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의 종국적 해결에 적극적 역할
- 금정산 국립공원 신규지정(24번째) 추진, 청년예비부부 대상 숲속결혼식 등 다양한 향유문화
- 지역특화 녹색거점 조성, 복원과 경제의 융복합 본보기 등을 통해 지역활력 제공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지난해 환경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극한 호우와 폭염 등 이상 기후에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 홍수 대비 하천 정비 투자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홍수예보를 도입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등을 통해 사회·경제 구조의 저탄소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민관이 원팀이 되어 국내 녹색 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 결과 2년 연속 수출·수출 실적 20조 원을 돌파(22조 7천억 원)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관리, 계절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겨울철과 봄철 국민 건강을 위협하던 초미세먼지 농도도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15.6\mu\text{g}/\text{m}^3$)으로 전망되는 등 환경오염 관리에도 최선을 다했다.

환경부는 그간의 환경정책 성과를 확산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25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부터 민생·안전과 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민생·안전’, ‘탄소중립’, ‘환경복지’를 3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1 기후위기 걱정없는 「민생 · 안전」

1 새로 짜는 범부처 기후위기 적응대책

- 기후변화는 국민 안전뿐만 아니라 농·수산업 수급에도 영향을 미쳐 생활물가 상승을 유발(기후물가)하고, 폭염·한파 피해 등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 문제다. 이에 환경부는 기후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범부처 민생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 극한 기후에 대비한 홍수·가뭄 기반시설(인프라)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폭염·한파 대피시설* 등 일상공간 기후적응 기반시설도 확대한다.

* 61개 지자체 열차단 페인트 도장, 야외 근로자 쉼터, 벽면 녹화 등 설치 지원('25, 95억원)

- 기후물가 대응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과정 전주기 관리를 통해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보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기후변화 피해 보상을 확대한다.
- 저소득층, 노인, 야외노동자 등 지역별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생활 에너지 사용비용 지원, 무더위 휴식시간제 확산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 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부처별 산재된 기후 적응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국민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정보플랫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 지역별 농산물 재배·어획변화 및 기후위험 예측정보 제공 → 대응지침 및 적응사업 발굴 지원

- 범정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기본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체,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대책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② 기후재난에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물 관리 시스템

- 예측 불가한 홍수에 대비하여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5월)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춘다.
- 최근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 등 취약구간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정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지능화(1천개)하여 홍수 시 행락객 위험정보를 인지해 자동알람과 지자체에 전파하는 등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 지역 수요와 지역주민 공감대를 고려하여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확정하고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등 제반절차를 추진한다. 또한, 댐 주변지역에 복지문화 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도 2배로 확대*한다.
- * [기존] '02년부터 20년 이상 300~400억원 수준 → [확대] 600~800억원 수준으로 확대
- 대규모 홍수방어 시설도 차질없이 구축한다. 도심 침수 방지를 위한 도심도 빗물터널(광화문, 강남역), 지하방수로(도림천) 설치도 본격 착수한다.
- 민생 안정과 국가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 물 공급 기반을 구축한다.
-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의 일환으로 안동댐을 활용하여 대구·경북에 맑은 물을 공급(46만톤/일)하는 정부대안을 확정하고 부산·경남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의령·창녕·합천 등 지역 주민 협의도 지속 추진한다.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107만톤/일),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2.1만톤/일) 등 첨단산업 물공급을 위한 용수공급 시설을 적기에 조성한다.
- 물 부족 지역과 산업단지 특성을 고려하여 지하수저류댐, 해수담수화 시설 및 하수재이용 시설 등 대체 수자원을 확충*한다. 물 재이용 범위를 당초 발전소 온배수만 포함했던 것을 원전 외 모든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지하수저류댐 설계·공사('25, 강릉 등 12개소) △대산산단 해수담수화 시설 준공('25.11, 10만톤/일) △여수·보령·상주 산단 하수재이용 시설 착공('25.上, 7.5만톤/일) 등

③ 대기질·수질 오염으로부터 국민 안전 보호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 생활공간 대기질을 집중 관리한다.

- 우선 주택가에 위치한 산업·공업단지 또는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설교체, 유지관리까지 전과정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 체계 】



-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 배출허용총량을 업종·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하고('23년 대비 약 30% 축소, ~'29), 다배출 업종 중심으로 배출 허용기준을 핀셋 강화하는 등 합리적 대기질 관리를 추진한다.

○ 녹조 관리와 산업시설 수질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 영주·남강·평림댐 유역 등 고농도 녹조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거점형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해 공공 처리시설 지원을 대폭 확대(594억원 → 1,167억원)하고,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우분(牛糞) 고체연료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 수질사고 방지를 위해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514억원 → 1,624억원)하고 미량오염물질과 과불화화합물 모니터링 항목을 늘리는 한편, 폐수관로 기술진단을 의무화한다.('25.1~)

②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

① 도전적 감축목표와 실현 가능한 액션플랜

○ 국제사회, 미래세대 요구에 부응하는 도전적 감축목표를 설정한다.

- 전문가 작업반 및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논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25.下)할 계획이다.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파리협정에 따라 5년에 한번씩 제출

- 기후 헌법소원 결정 후속조치에 따라 2050년까지의 감축경로의 법제화(~'26.2)를 차질없이 추진한다. 전문가 쉥크탱크인 '기후미래포럼*'을 통해 복수의 감축경로(안)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방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분과] △총괄 △감축경로 △미래사회 / [구성] 감축부문별 전문가 및 미래/경제/법률 전문가 50여명

- 2035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부문별 감축목표를 설정('25.下)하는 한편, 현장수요에 기반한 기후대응 기술개발을 위해 학회, 정부출연연구소, 업계가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도 기술개발 기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지역이 탄소중립 이행을 주도하는 여건을 만든다.

- 2024년 17개 광역 시도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올해는 기초지자체(243개)도 기본계획을 수립(~'25.4)하여 지역단위의 유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온실가스 감축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 ('24) 47 → ('25) 57 → ('27) 100개소 목표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선도도시(4개소)*를 본격 조성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특화 녹색산업클러스터**를 활용하여 기후기술(테크) 기업의 연구·실증·상용화를 지원하고 특성화대학원과 연계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

* △에너지+ 산업 유형(당진) △에너지+ 폐기물 유형(제주·보령) △건물+ 인프라 유형(노원)

** 전기차배터리 클러스터(포항) 준공, 폐반도체(구미) 착수 등

- 지역 환경시설과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주민 수익창출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상생의 본보기를 구축한다.

【 지역 재생에너지 기반 사례 】

- (수열클러스터) 수온이 낮은 댐 호수물 기반 수열E + 데이터센터·스마트팜, 시설 냉각에 소요되는 전력량 30~40% 수준 절감 (강원 소양강댐, 충북 대청댐 등)
- (수상태양광) 댐 주변 지역주민 에너지 지원,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수상 태양광 사업(경남 합천댐, 강원 소양강댐 등) ※ 2개 → '27년까지 7개 설치 추진
- (바이오가스) 지역 유기성폐자원을 수거·바이오가스화하여 악취 등 환경영향 최소화, 발전, 도시가스 공급 또는 수소생산에 활용 (청주, 보령 청정수소 생산시설 등)
※ 통합생산시설 15개소 → 23개소로 확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본격시행('25.1) 및 공급인증제 도입 추진('25.9)

② 산업·수송 등 부문별 맞춤형 대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 정유, 철강업종 등 다배출 업종 협의체를 운영하여 감축 컨설팅, 현장 수요에 기반한 기후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정부-수출기업(협력사 포함) 협치(거버넌스)를 구성하여 공급망 단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지원한다.
- 기업이 혁신적인 감축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혁신기술지원 시범사업('25년 100억 원)을 추진한다.
- 탄소국경제도, 기후 공시 의무화 등 해외 탄소규제에 국내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설비 지원 등 '일괄 묶음 (원스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고 국제 환경규제 준수사항을 사전 점검할 수 있는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 성능이 우수한 무공해차 보급을 촉진하고, 보다 편리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무공해차 대중화를 촉진한다.
-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성능이 좋고 안전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제작사가 전기차 가격을 할인하는 경우 할인 수준에 비례해 추가 보조금을 제공하여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이동 거점뿐만 아니라 충전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 생활공간 주변에도 급속충전기를 확충('24년 3,100 → '25년 4,400기)하고 고정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이동형 충전기를 적극 활용하여 충전 불편을 최소화한다.

- 충전량을 실시간 확인하여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제어 충전기도 본격 도입(9.1만대)한다.
- 수소차의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인천 등 액화수소 생산지와 연계한 액화수소 충전소를 확충하며, 천연가스(CNG) 충전소는 단계적으로 수소충전소로 전환하여 충전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저탄소 경제를 실현한다.

- 플라스틱 제품 생산·설계 시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2030년 30%로 설정하고 올해에는 10%까지 상향('24년 3%)한다.
 -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경우, 전국 확대 기조는 유지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대상, 기준, 방식을 적용하되, 놀이공원, 카페거리, 대형 프랜차이즈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지역 축제 등에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별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다회용 택배 전환 시범사업(세척, 회수비 등 지원)을 통해 플라스틱 감량의 효과성을 높인다.
 -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도입 등 재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공지능(AI) 전자폐기물에 대해 민관협업(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사업자)으로 회수·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미래 폐자원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선제적으로 확대*한다.
-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거점수거 기능 강화, 전기차 전주기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전품목 확대 추진

○ 불소계(수소불화탄소* 등) 냉매원료를 대체 물질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한편, 재생냉매 사용도 확대한다.

* 이산화탄소 대비 수천배 이상의 온난화 효과가 있으며, 냉동냉장용 냉매, 소화설비 등에 사용

③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녹색산업 견인

- 온실가스 감축이 기업 혜택으로 직결되고 활성화된 탄소시장이 기업 감축을 견인하는 선순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하고, 추가 수익으로 기업 감축지원을 확대해 시장 효율적 감축을 유도한다.

* ('18~'20) 3% → ('21~'25) 10% → ('26~) 발전 부문 유상할당 대폭 상향

- 은행 및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과 연계한 금융상품(선물 등)을 도입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한다.
 - 배출권 거래제 미대상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성화한다. 관계부처,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탄소 크레딧 시장 전담반(TF)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 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2024년 1.5조 원에서 2025년 3.5조 원의 녹색 투자효과를 견인, 강소 기후기술(테크)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 녹색분류체계 개선을 통해 녹색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후분야 경제활동 유형을 확대하는 한편, 여신,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과 연계한다.
 -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 또는 신용이 부족하여 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은 이번에 새로 도입한 녹색전환보증(1,400억 원)을 통해 약 1.5조 원의 자금을 보증받아 조달할 수 있다.
 - 녹색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수요 확대를 위해 녹색기술·제품에 대한 조달 인센티브 강화 및 대상제품 확대(조달청 협업) 등을 추진한다.
- 국제 감축사업,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등에 구축한 정부와 해외 협력국 간 소통창구를 적극 활용하여 녹색산업 수주수출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민관 합동으로 녹색산업 수출펀드(약 4천억원)를 조성하여 재정적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3 전 국민이 혜택을 받는 「환경복지」

1 국민 일상을 지키는 환경 안전망 구축

- 촘촘한 환경 안전망으로 일상 생활공간 환경 위해요인을 최소화한다.
- 주거공간, 지하역사, 조리공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중심으로 배출원 감시(모니터링), 환기·저감설비 지원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 민감계층 이용시설, 취약계층 거주 가구에 실내 환경 컨설팅(5천개소)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어린이(1만명)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 실내환경 진단, 환경성질환 진료비 지원, 건강나누리캠프, 아토피로션 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 중 선택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위험도·취급량 및 업종에 따른 차등적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되, 현장점검(연 2,800 → 3,500회)을 확대하여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생활화학제품 내 원료의 유해성 정보를 등급화(안심/양호/보통/관심)하여 알기 쉽게 표시하는 자율 안전정보 공개를 본격 시행하고, 불법제품 차단을 위해 제품의 안전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온라인 유통 상시 감시도 대폭 확대*한다.
- * (안전성조사) '24 2.1천건 → '25 4천건, (온라인 감시) '24 2만개 → '25 4.5만개 판매 페이지
- 환경위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한다.
 -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중국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해 조정의 실효성 확보, 구제자금 안정화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25.下)한다.
 - 올해부터 환경피해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까지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괄(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여 신속·공정하게 환경피해를 구제한다.



② 국토의 자연 생태적 가치 증진 및 폭넓은 향유 기반 마련

- 자연 보전지역을 확대하여 국토의 생태적 가치를 높인다.
 - 부산·경남 금정산을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신규 지정 추진하고, 곡성 반구정을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보호지역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 또한, 기업의 자연환경 복원,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참여 등 다양한 생물다양성 보전활동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적으로 인정되도록 제도화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 다양한 국립공원 친환경 서비스를 통해 2030년까지 탐방객 연 5천만명을 달성한다.

※ 연간 국립공원 탐방객 3천 8백만명, '23년 기준 캠핑인구 7백만명 추산

- 국립공원 111(1 공원 + 1 탐방체류시설 + 1 테마)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글램핑장 등 캠핑 초보자도 체류형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 생태교육 등 친환경 서비스도 제공한다.
-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숲속 결혼식을 본격 추진한다. 청년예비부부(50쌍)를 대상으로 국립공원 내 야외 결혼식장을 제공하고 웨딩촬영 등 4백만원 상당의 결혼식 비용을 지원한다.

③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환경서비스

- 댐 주변 지역이나, 난개발 오염지를 중심으로 환경서비스를 강화한다.
- 2천만^m 미만 소규모 댐도 댐 건설 후 매년 생활지원(의료비·난방비·교통비 등), 학자금·장학금 지원, 노인복지 지원 등을 시행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중 인구소멸지역은 수계기금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 서천 장항제련소 등 생태계 훼손지에 대해 생태 복원을 적극 추진하고, 난개발 오염지에 대해서는 김포 거물대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사례*와 같이 환경 복원과 지역경제 활력을 동시에 도모하는 융복합 복원 본보기(모델)를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김포시 거물대리 인근 공장 난립('18년 기준 254개)로 토양 오염, 주민 건강피해 및 오염
→ 친환경 혁신복합단지 조성(오염정화 + 신재생에너지 공급단지 + 생태공원 '24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환경부가 환경처에서 승격된지 31년이 되는 해로, 환경부의 새로운 30년은 ‘기후’ 환경부로서 범정부 기후변화 대책을 새롭게 짜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신규·강화되는 주요 환경정책.
2. (인포) 2025 주요업무 추진계획.
3. (인포) 2025 지역별 환경 투자 지도. 끝.

담당 부서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최민지 (044-201-6330)
		담당자	서기관	정윤희 (044-201-6331)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붙임1

신규·강화되는 주요 환경정책

(강) 강화 (신) 신규

구분	~2024년(환경부)	2025년("기후" 환경부)
핵심과제 ① : 기후위기 걱정없는 「민생·안전」		
기후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대응 중심 기후적응대책(제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 관계부처 협업 민생(기후물가 등) 중심 적응대책 수립(제4차) (신) 「기후적응특별법」 제정 맞춤형 적응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추진
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대응댐) 14곳 검토, 의견수렴(공청회 등) (하천정비)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24.10) (홍수예보) AI 기반 스마트예보 최초 도입(2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지 확정 → 기본구상 → 타당성조사 (강) 10곳 추가승격(25.1), 홍수기 前 취약구간 신속 정비 (강) AI CCTV 지능화 → 홍수시 행락객 자동 인지, 알람자재 전파
핵심과제 ② :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		
감축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NDC) 2030 NDC(21) 이행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 2035 NDC 마련 및 UN 제출(연내) (신) 50년까지 복수의 감축경로(안) 마련(~25.下), 법제화(~26.2)
탄소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중심,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및 시장조성자 등만 시장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 △유상할당 대폭상향(발전), (신) △기관투자자도 시장 참여(25.2~), (신) △민간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25.上)
녹색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금융) 중소기업 약 1.5조원 투자 건인 (녹색조달) 녹색인증 제품 공공조달(조달청, 의무구매(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 약 3.5조원까지 확대(채권, 유동화증권 고려 시 더 확대) (신) 중소·중견기업 녹색전환보증 도입(1,400억원) (강) 환경부-조달청 협업을 통해 녹색기술·제품 조달가점 및 대상제품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25.上)
전기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능에 따라 전기차 구매보조금 차등적용 (충전기반) 이동거점 → 급속, 생활거점 → 완속충전기 중심 충전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 다자녀가구 최대 300만원 추가지원, 생애 첫구매 청년 기본 국비보조금의 20% 추가지원 등 (강) 생활공간 급속 확충, 스마트제어 도입 및 이동형 충전서비스 확대
플라스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컵보증금제) 세종·제주 선도 시행 (재생원료) 사용목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 선도지역 지속추진 + 놀이공원·카페거라프렌차이즈 등 자율시행 확대 10%(30년까지 30% 목표)
핵심과제 ③ : 전국민이 혜택받는 「환경복지」		
환경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집중 (피해자 5,828명, 판정완료자 6,681명(91%)) (취수원다변화) 안동댐을 활용한 대구·경북지역 물공급 방안(정부대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 정부 주도 중국적 해결 위한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운영(25.上)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 추진(25.下) (신)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서비스를 단일 창구에서 처리하는 원스톱서비스 제공(25.1~) 정부대안 확정(25.上), 부산·경남 물 공급 위한 주민협의로 지속
국립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공원) 금정산 신규지정 관련 부산지역 공청회(2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 경남·양산지역 공청회(25.1) → 금정산 신규지정 추진(25.上) (신) 국립공원 111 프로젝트*, 청년 예비부부 숲속결혼식 서비스(25.4~, 총 50쌍, 1쌍당 결혼식 비용 400만원 상당 지원) * 1공원 + 1탐방체류시설 + 1테마
녹색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댐) 댐 주변 300~400억원 규모 정비지원 (오염지)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 2배 확대(600~800억원 규모), 소규모 댐(2천㎡ 미만)도 지원 개발계획 수립(25~26) 및 해당 복원+경제 융복합 모델 확산 (신) 탄소중립 선도도시 본격 조성(4개소)

민생과 미래세대 행복을 지키는 2025 환경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기후위기 걱정없는 “민생·안전”

새로짜는 범부처 기후적응대책

국민 체감 범부처 패키지 대책



기후물가관리



기후보험개발



취약계층지원

기후적응 대책 추진기반



협의체, 자문단



기후위기적응법 제정



정보플랫폼

안전·탄탄한 물관리

홍수방어



기후대응댐



하천정비



도심홍수방어



스마트 예보

물 공급



취수원 다변화



관로 확충·정비



대체수자원 개발

철저한 환경오염 대응

우리동네 맑은공기 만들기



사업장
전주기 관리



배출총량 축소
(*'23→'29 30% ↓)



미세먼지
예측 고도화

녹조 예방, 수질사고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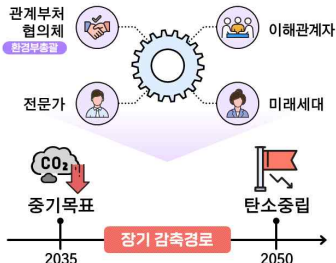
비점오염관리 강화



완충저류시설 확대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

도전적 감축목표, 실현가능한 액션플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다배출 업종



주요업종
협의체 운영



CBAM 대응
원스톱지원



국제 감축
온실가스



자연
흡수원

무공해차



성능·환경성
가성비
충전인프라

순환경제



플라스틱
저감



미래폐자원
재활용

녹색산업 견인

탄소배출권 시장



유상할당 확대
→ 기업지원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도입



자발적
탄소시장활성화

중소기업 녹색투자



1.5조원
2024



3.5조원
2025



기술발굴



사업화 지원

기후테크+AI 연계

전국민이 혜택받는 “환경복지”

국민 일상 환경 안전망

일상 속 위해요인 최소화



실내공기질



생활화학제품



민감·취약계층
* 환경보건이용권



화학안전



환경피해 신속구제



원스톱 피해구제서비스

국토의 생태적 가치 증진

자연 보전지역 확대



금정산



신규 국립공원 지정 추진



생물다양성 보전 → ESG 인정

고품질 국립공원



국립공원111
(1공원 1탐방채류시설 1테마)



무장애
탐방로



국립공원
명품마을

지역 활력 환경서비스

댐 주변지역



인프라
지원 확대



주민참여형
수생태양광 사업



인구소멸지역
수계기금지원 ↑

오염 취약지역

- 난개발 → 복원 + 경제활력
- 생태계 훼손 → 유형별 녹색복원



환경가치 지키고! 지역활력 높이는! 2025 지역별 환경 투자 지도

